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1995. 2.

申 相 振(國際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 目 次 -

I. 問題提起	1
II. 中國의 國內情勢 展望	3
1. 集團指導體制 維持	3
2. 地方에 대한 中央의 統制力 維持	5
3. 軍部の 影響力 增大	7
4. 少數民族問題 擡頭	8
5. 政治的 統制下の 經濟發展 持續	9
6. 內部 政治混亂 可能性 尙存	11
III. 中國의 對韓半島政策 展望	13
1. 對外政策 基調와 方向	13
2. 對韓半島政策 方向	14
IV. 韓國의 考慮事項	18
1. 對中國 次元	18
2. 對南北韓關係 次元	19
3. 對國際關係 次元	20

I . 問題提起

- 1994년 8월 22일로 만 90세를 맞은 鄧小平은 최근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사망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1993년 鄧小平 회고록을 저술한 바 있고 鄧小平의 근황을 가장 명확하게 대변해 온 鄧小平의 三女 鄧蕭榕은 「뉴욕타임즈」지와 회견(1995.1.13)에서 鄧小平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이와 관련, 중국 공산당 기관지 「人民日報」는 최근 鄧小平思想 학습을 강화하고 江澤民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역설하고 있으며, 당 지도부도 당초 예정되었던 군부인사 개편 작업을 지연시키고 정치국회의를 개최하는 등 鄧小平 사후 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鄧小平은 1978년이래 개혁·개방정책을 채택·추진하여 온 중국 최고 실권자이며 중국이 개인 지도자의 비중이 큰 人治社會라는 점에서 볼 때, 鄧小平의 사망은 중국의 대내외정책 변화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1976년 毛澤東 주석 사망이후 중국에서는 「4人幫事件」 등 文

革派와 反文革派간 권력투쟁이 전개되고, 정치·경제·외교면에서 전면적인 정책변화가 나타났음.

-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鄧小平 사후 중국의 국내정세 및 對한반도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한편 한국정부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II. 中國의 國內情勢 展望

1. 集團指導體制 維持

- 鄧小平 사후 중국에서는 江澤民을 중심으로 하는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表> 참조)에 의한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1976년 毛澤東 사망이후 華國鋒 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한 이유는 華國鋒이 毛澤東 사망 5개월전에 후계자로 지목되어 권력기반을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중국 지도부내에서 文革派와 反文革派간의 대립이 심각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임.
 - 江澤民은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鄧小平 후계자로 공식 확정되어 현재 중국 당·정·군의 최고 책임자 위치에 있으며, 당·정·군의 핵심 지도부내에 지지기반을 구축하여 왔음.
 - 江澤民은 1989년 당중앙군사위 주석에 임명된 이래 3大 總部(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군부) 및 7대 軍區 주요 지휘관을 자파 인사로 교체하고 총 29명의 上將중 25명을 직접 임명하는 한편, 무장경찰부대(국내치안 담당) 사령관에 측근인 巴忠潭을 임명함으로써 군부내 세력기반을 강화하여 왔음.
 - 江澤民은 1994년 9월 14기 4중전회에서 黃菊 上海市長을 정치국원에 임명하고, 吳邦國과 姜春雲을 중앙 서기처 서기로

등용하는 등 지지세력을 당 핵심부에 포진시켰음.

- 중국은 1994년 9월 기존 5명의 중앙 서기처 서기를 7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서기처의 권한을 강화하였는 바, 이는 鄧小平 사후 집단지도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¹⁾
- 아울러 중국 지도부는 鄧小平 사후의 권력투쟁은 공산당 지배체제에 심대한 타격을 미쳐 지도부 전체에 공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바, 집단지도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表>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직 내용

지도자	겸 직 직 위	담 당 분 야	연령
江澤民	黨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당, 정, 군	69
李 鵬	國務院 총리	國務院	67
喬 石	全人大 상무위원장	全人大, 公安	71
李瑞環	政治協商會議 주석	선전, 통일전선	61
朱鎔基	國務院 부총리	경제	67
劉華清	중앙군사위 부주석	군	79
胡錦濤		당조직, 인사	53

1) 중국 공산당은 1956년 9월 8차 당대회시 중앙 서기처를 신설하여 毛澤東이 장악하고 있었던 정치국을 견제함으로써 집단지도체제를 모색한 바 있음.

○ 그러나 江澤民 등 중국의 신지도부는 毛澤東이나 鄧小平과 같은 정치적 카리스마를 결여하고 있고 혁명과 권력투쟁 등 정치적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관료출신 정치가인 바, 鄧小平 사후 최고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재량권에 한계가 있을 것임.

- 따라서 중국 지도부는 당 원로들을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병풍역으로 활용함으로써 통치기반을 강화할 것인 바, 萬里, 薄一波, 楊尙昆, 宋平 등 원로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鄧小平 사후에도 중국 당 원로들은 政治局 擴大會議 참여나 일선 정책결정자에 의해 입안된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圈閱制度) 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

2. 地方에 대한 中央의 統制力 維持

○ 1978년 이래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상당부분 지방에 이양해 주었는 바,

2)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는 지방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

2) 중국은 5천만 달러 이하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직접 계약할 수 있게 하였으며, 1992년말 기준 중국 총 재정수입중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비중이 약 60%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수지 악화와 지방에 대한 통제력 약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1993」(北京: 中國統計出版社, 1993), pp. 24, 229.

하고 있으나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지역분리주의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鄧小平 사후에도 중국은 경제개혁·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유보해 줄 수 밖에 없을 것인 바, 이는 지방분권화 추세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鄧小平 사후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치적 통제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주로 재정·조세·무역 등 비정치적 분야에 국한되어 왔음.
 - 중국은 1993년 이래 「分稅制」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에 이양되었던 재정권한 회수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회복을 기하여 왔음.
 - 군사 현대화는 강력한 중앙정부하에서 가능하므로 중국 각 지역 군부가 중국의 분열을 바라지 않고 있는 바, 군부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지지하지 않을 것임.

3. 軍部の 影響力 增大

○ 鄧小平 사후의 정치적 과도기에 중국 지도부는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예산을 확대하고 군 인사를 당 지도부에 대거 등용하는 등 군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할 것인 바, 중국정치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 증대가 예상된다.

○ 중국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는 정치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당·군관계의 속성상 군은 당의 명령과 통제하에 정치 문제에 개입할 것인 바, 군의 정치개입이 공산당의 통치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임.³⁾

- 1960년대 말 文化大革命과 1989년 天安門事件 등 정치적 혼란기에 정치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군부가 동원되었음.

○ 한편, 군부의 영향력 확대는 중국의 군사력 증대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1989년 이래 중국은 매년 10% 이상 국방비를 증액하여 왔으

3) 이에 대해서는 申相振·全賢俊,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 黨·軍關係를 中心으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며, 중국의 실제 국방예산은 약 2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대양진출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바, 육군 보다는 해군과 공군력 증강에 우선을 둘 것임.

4. 少數民族問題 擡頭

○ 鄧小平 사후의 정치적 과도기에 新疆과 西藏 등 회교도 자치구에서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요구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음.

- 1950년 10월 鄧小平은 西南軍區 정치위원으로서 西藏 무력 침공 작전을 진두 지휘하였음.

- 1951년 西藏이 중국에 의해서 무력으로 점령당한 이후 1959년 달라이 라마가 인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등 분리독립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음.

○ 또한 1996년말 대만에서 대선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고 1997년 7월 중국이 홍콩 주권을 회복하기로 되어 있는 바, 홍콩 주권 반환 시점을 전후하여 대만에서 분리독립 주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一國兩制」 통일방안을 통하여 홍콩 주권 이양을 대만통일 문제와 결부시켜 왔는 바, 홍콩 주권 반환이후 대만에

○ 대한 흡수통일 정책을 적극화 할 것임.

- 따라서 대만에서 대만독립을 당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民進黨 인사가 총통에 선출될 경우 대만독립 움직임이 구체화 될 가능성이 큼.

○ 그러나 鄧小平 사후 소수민족문제가 중국의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西藏과 新疆 등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이민정책과 교화정책을 실시하여 漢族으로 동화시켜 왔음.
- 西藏과 新疆 自治區내 소수민족 사이에서 분파가 존재하고 있고,⁴⁾ 과격한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종족은 극소수에 불과함.
- 대만독립 주장자들은 급진적 분리독립 주장이 중국에게 대만 침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 독립 주장을 자제할 것임.

5. 政治的 統制下的 經濟發展 持續

○ 鄧小平 사후 江澤民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는 권력승계의 과도기에 대내 안정과 단결을 강조할 것인 바, 현재와 같은

4) 新疆自治區에는 우구르족 이외에 몽고족, 回族, 하자크족, 東鄉族, 타타르족, 우즈베크족, 키르키즈족, 러시아족 등이 있으며, 西藏自治區에서도 藏族, 門巴族, 珞巴族 등이 서로 상대방을 견제하면서 병존하고 있음.

경제개혁·개방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음.

- 중국은 14차 당대회와 1993년 14기 3중전회 등을 통해 향후 「政治左傾, 經濟右傾」을 표방하는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를 확립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음.⁵⁾

- 現 경제개혁·개방노선에 대한 중국 지도부내 의견 대립이 크지 않음.

- 중국국민 대다수가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

○ 그러나 鄧小平 사후 중국은 지역·계층간 소득 격차, 인플레이, 부패 등 개혁·개방에 따른 부작용 해소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급진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경제개혁의 속도와 폭을 완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중국은 경제성장율의 하향 조정,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당원과 정부 관리의 부패에 대한 정풍 강화, 연해지역에 대한 지원 축소와 내륙지역 개발 지원 확대 등 안정 위주의 긴축경제 기조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됨.

5) 「文匯報」(香港), 1992. 10. 13; “中共中央關於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 「文匯報」(香港), 1993. 11. 17.

6. 内部 政治混亂 可能性 尙存

- 鄧小平 사후 중·장기적으로 지역·계층간 경제격차, 중앙·지방간 갈등,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요구 및 국민의 정치적 다원화 요구 등이 심화되어 중국이 정치적 혼란에 처할 가능성도 있음.
 - 내륙 농촌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중국 인구의 약 80%에 달하는 농민의 도시 이주를 자극하여 도시지역 범죄와 실업자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지방정부의 경제분권화에 따른 지역분리주의 현상은 중국의 분열을 조장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소수민족 인구가 97%에 달하는 티벳지역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가능성, 1997년 홍콩 주권회복 이후 예상되는 홍콩과 대만의 분리독립 주장도 중국의 체제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鄧小平 사후 경제발전이 지속되는 반면 정치 민주화에 진전이 없을 경우, 江澤民 지도체제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념이 약화되고 정치적 자유와 민주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어 제2의 天安門事件이 발발할 수도 있음.

- 鄧小平 사후의 지도부가 인플레이, 지역·계층간 소득격차, 지역분권화 및 홍콩문제 등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지도부

내 권력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1997년 가을 개최될 15차 당대회시 李鵬, 喬石, 劉華清 등 정치국 상무위원의 교체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를 계기로 지도부간 권력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공안조직내에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喬石과 군부에 영향력이 있는 楊尙昆과 楊白冰 및 王瑞林 등이 집단지도체제에 불만을 품고 권력투쟁을 통해 대권 장악을 기도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鄧小平 사후 중국 지도부가 강력한 리더쉽을 행사하지 못하여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경우, 군부가 등장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대체이념으로 中華民族主義를 고취시킬 가능성도 있음.

Ⅲ. 中國의 對韓半島政策 展望

1. 對外政策 基調와 方向

- 鄧小平 사후에도 중국은 대내 경제건설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경제력과 군사력 증강을 통해 아시아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는데 대외정책 목표를 들 것이며, 미·일 등 서방국가와의 경제협력정책과 주변국에 대한 선린의 교를 지속할 것임.
 - 鄧小平 사후 중국지도부는 개혁·개방정책을 통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이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할 것인 바, 중국의 대외정책 노선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그러나 鄧小平 사후 권력승계의 과도기에 군부 등 보수파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외 정책자세가 다소 경직될 가능성도 있음.
 - 과거 중국은 정치적 변혁기에 대외 타협정책 보다는 대외 강경정책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음.
 - 1987년 胡耀邦과 1989년 趙紫陽이 숙청된 이유중의 하나는 이들이 인권과 민주개혁 요구에 동정적 태도를 보이고 대외

타협노선을 추종하였던데 있었는데, 鄧小平 사후의 지도부가 강경파에 의해 숙청당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대외 강경외교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鄧小平 사후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념적 색채 보다 국가의 실리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
- 또한 중국은 中華民族主義 기치하에 홍콩과 臺灣의 주권회복과 南沙群島의 영유권문제 및 인권 등 내부분쟁에 대해 강경 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음.

2. 對韓半島政策 方向

- 鄧小平 사후 중국은 대내외 안정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것인 바, 중국은 당분간 현재와 같이 정치적으로는 북한을 우선시하고 경제적으로는 한국을 중시하는 남북한에 대한 정경분리 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할 것임.
- 1992년이래 江澤民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한반도정책을 결정하여 왔는 바, 鄧小平 사후 江澤民 중심의 집단지도체제하에서 중국의 한반도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가. 對北韓 政策

- 중국은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중국의 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인식하여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도록 북한에 대한 최소한도의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임.
 - 중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하거나 북한이 한국에 의해서 흡수통일될 경우 중국의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북한에 대한 최소한도의 지원정책을 당분간 지속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할 것임.
 - 鄧小平 사후 중국과 북한은 유대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 혁명이후세대 지도부간 교류와 접촉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관련, 李鵬 총리는 1995년 1월 북한 張澈 부총리에게 중국이 북한 김정일정권과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鄧小平이 북한 혁명세대 지도자들과 긴밀한 교분을 갖고 있었다는 점과 간부 年輕化 정책에 따라 「抗美援朝」전쟁에 참전하였던 군간부들이 교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⁶⁾ 북한에 대한 중국의 무조건적인 지원정책은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임.

6) 중국에서는 「軍官服務條例」를 통해 군지도자의 복무연한을 제한하고 있음. 한국전에 참전하였던 중국 군지도자들은 현재 대부분 65세 연한을 넘어섰는데, 이미 퇴역되었거나 곧 퇴역할 시기에 처해 있음.

- 그 동안 중국은 북한을 한, 미, 일 등에 대한 외교정책을 전개하는데 부담요인으로 인식하여 왔는 바, 鄧小平의 사망은 장기적으로 북·중관계를 혈맹관계에서 단순한 우호협력관계로 변질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북한의 무리한 對美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지지하기 보다는 북한과 미국 이외에도 중국과 한국이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임.
- 또한 중국의 지방분권화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원조 제공이 현실적으로 곤란해지고 있는 점도 북·중관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중국 東北三省은 북경의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석유 및 식량 제공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나. 對韓國 政策

- 鄧小平 사후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정책을 더욱 적극화 할 것임.
- 그러나 鄧小平 사후 중국이 성장보다 안정 중시의 긴축정책

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 투자가 일시적으로 감소되는 등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 속도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아울러 장기적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한국과의 정치·안보적 협력관계를 점진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모색할 것임.

- 이와 관련,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바, 1995년 11월 APEC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江澤民 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가능성이 큼.

IV. 韓國의 考慮事項

1. 對中國 次元

- 鄧小平 사후 중국이 정치적 안정하에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 바, 한국정부는 대외협력 지향적인 인사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임.

- 鄧小平 사후 중국에서 지방분권화 추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바, 한국정부는 北京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東北三省 등 중국의 지방정부(지도자)들과의 접촉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鄧小平 사후 중국은 인플레이 심화 등 개혁·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안지역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등 긴축 기조의 경제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한국정부는 기업인의 대중 투자부문 및 투자지역 선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임.

- 중국지도부는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예산을 확대하는 등 군사력 증강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안보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과 상호 불가침 내용을 포함하는 기본관계조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쌍무간 안보협력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임.

2. 對南北韓關係 次元

- 鄧小平 사후 중국 대외정책 자세의 보수화와 북한의 내부단속 강화 가능성을 감안, 한국정부는 북한 개방유도 정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당분간 민간주도의 비공개적·간접적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鄧小平 사후 단기적으로 북·중관계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한국정부는 중국 카드를 이용한 대북 개방 유도정책을 당분간 자제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북한의 개방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한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개방유도 정책을 북한 사회주의체제 흡수전략으로 간주하고 있음.

- 중국은 내부적으로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바, 한국정부는 한반도 휴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한국이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게 인식시키는데 중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1995년 4월과 11월 성사될 예정인 喬石과 江澤民 등 중국 지도자의 방한시 남북한간 평화협정 체결 등 남북한관계 발전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야 할 것임.

3. 對國際關係 次元

- 鄧小平 사후에도 중국에서 안정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동북아질서 안정에 필요한 바, 한국정부는 미·일 등 국제사회로 하여금 중국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권문제 등과 관련 중국에 대해 과도한 압력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江澤民 지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鄧小平 사후 군부의 영향력 확대로 중국이 군사력 증강속도를 가속화 할 가능성에 대비, 한국정부는 미, 일, 러 등 주변국과의 협력하에 중국이 지역 다자안보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的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 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的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 秩序·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8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를 中心으로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연구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
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을 계기로 본 亞·
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 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4)

〈資料〉

92-01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統一文化 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統一情勢分析 95-01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5年 2月 日

發行日 1995年 2月 日
